
「2021-제5호(Vol. 13호)」

예산·재정 정책연구 동향

본 자료는 2021. 6. 8. 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 원 도 의 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전망보고서(2021.5월)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2. 재정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2021년 기금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3. 예산·재정 관련법령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4. 정책 및 연구 (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예산 외의 의무부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방안 지역 풀뿌리산업의 창업·성장거점: 지역특구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예산·재정관련 뉴스브리핑 (7~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 강화, 분석의 정확성 제고 등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대폭개선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사회 한 목소리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 경제

출처

■ 경제전망보고서(2021.5월)

한국은행

-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으로,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이 예상됨.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제조업황이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으로, 취업자수는 2021년 14만명, 2022년 2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금년 중 국제유가 오름세 확대 등으로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커진 데다 경기회복세 강화로 수요측 물가압력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1.8%, 2022년 1.4%로 전망됨.

【 경제성장률 전망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1.0	3.7	4.2	4.0	3.2	2.8	3.0

[바로가기](#)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현대경제연구원

- (개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상·하방 요인 등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

경제 이슈		선정배경
해외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향후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 방역환경 차이 등에 따라 국가·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
	② 냉전 시대의 도래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술 적응도도 더욱 빨라지는 모습
국내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최근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③ 막 올린 ESG 경영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ESG 경영 확산 가속화
	④ RENEW 남북경협	남북경협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지지, 국민적 공감대, 경험 제도화, 민간 주체들의 적극성 필요

[바로가기](#)

2. 재정

출처

■ 2022년도 예산 요구 현황

기획재정부

- (요구 규모) 각 부처가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2조원으로, '21년도(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임.
- (주요 요구내용) 각 부처는 우리 경제의 「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2년 예산을 요구함.
 - ① 환경: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 17.1% 증액 요구
 - ②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 9.6% 증액 요구
 - ③ R&D: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 요구
 - ④ 국방: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보급·급식단가 등 장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 5.0% 증액 요구
 - 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 3.2% 증액 요구
 - ⑥ 문화·체육·관광: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 2.2% 증액 요구
 - ⑦ 교육: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2.0% 증액 요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포함 시 9.2% 수준)
 - ⑧ SOC: 지출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 필수투자 중심 0.1% 증액 요구
 - ⑨ 일반·지방행정: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액 요구(지방교부세 포함 시 6.7% 수준)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바로가기](#)

■ 2021년 기금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준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25.(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힘.
 - * 코로나19 위기에도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9.19% 달성
- (자산운용평가 결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전략을 평가한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음.
 -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 평가 기금(21개) →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2개 기금
- (기금준치평가 결과) 25개 기금에 대해 ①준치타당성, ②사업적정성, ③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사업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개선 권고를 확대하였음. ⇒ 24개 준치, 1개 기금 조건부 준치(과학기술진흥기금)
 - * 매년 전체기금(67개)의 1/3씩 평가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5개 기금

[바로가기](#)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1.2.17. 개정 / ’21.6.1. 시행)

-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자산의 양도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위탁자에게 과세되는 신탁의 요건,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에 따른 과세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추정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2.31. 개정 / ’21.6.1. 시행)

-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2020.12.29. 공포, 2021.1.1. 시행)됨에 따라,
-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가 증가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법제처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021. 12. 3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 이번 개정안은 벤처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고, CVC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40%로 설정하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및 정보교환 규율대상 정보를 구체화 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한,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을 구체화하되, 소규모 비상장사(자산총액 100억 원 미만)에 대해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4. 정책 및 연구

출처

■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도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및 관련 대책을 통해 국내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복귀 실적은 제한적인 상황임.
- 분석결과, 국내복귀 확대를 통한 국내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동반복귀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을 점검하고, 국내복귀 유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첨단산업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국내투자 및 고용의 양적·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국내복귀기업 선정·지원과정에서 지자체 발전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함.

[바로가기](#)

■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들어가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최초 도입 이래 20여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 기준 및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최근의 국가재정 규모와 발전된 경제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법적 근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해당됨.
- (현황)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실시된 총 조사건수는 932건, 총사업비는 426.9조원이다. 이 중 592건(248.0조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340개 사업(178.9조원)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관련 쟁점) 예타 제도 관련으로 다음 4가지의 쟁점이 있음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② 예타 면제사업 및 대상사업 기준 불명확 ③ 예타 종합평가 평가항목 비중 조정 ④ 경제성 분석 관련 편의항목 다양화
*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나가며) 현재 21대 국회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건 발의되어 있음. 국회에서는 이러한 각계의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면제사업의 대상 및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바로가기](#)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발전과제

- (서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의 운영 원칙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제도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운영 현황) 2017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심사는 4,851건에 49조 8,285억원 규모로 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및 부적정·반려 등이며, 중앙심사의 경우 총 592건을 심사하여 적정 52건, 조건부 370건, 재검토 및 부적정·반려 170건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2,656억원을 심사하여 적정 1,778건, 조건부 854건, 재검토 및 부적정·반려 24건으로 나타남.
- (자료 작성 시 오류사항) 심사자료 작성 시 발생하는 오류로는 문화·체육시설 사업의 오류,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오류, 관광객 수요추정 오류, 운영수지 전망의 오류, 총사업비 산정 시 오류, 체육시설 활용도 적용 오류, 공유재산 활용 시 지방비 부담액 추정 오류, 자체 타당성조사 보고서 오류 등이 있음.
- (발전과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① 중앙 투자심사 조직 확대 및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신설 ②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체 투자심사 절차변경 검토 ③ 투자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시스템관리 필요 ④ 투자심사 면제 사업 일몰제 도입 등이 있음. *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 지역 풀뿌리산업의 창업·성장거점: 지역특구

- (들어가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0년대 초반 제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규제특례만 적용하고 지자체의 투자 외에 중앙정부의 별다른 재정·세제지원이 없어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형국임. 특히, 지자체의 무관심에 따른 사업부진 및 중단, 경직적 제도 운영에 따른 퇴출 및 구조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산업과 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어 지역의 미래 산업·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소진되고 지역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마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제도 운영 성과) 지역특구는 2004년 최초로 6곳이 지정된 이후 2021년 4월 현재 152개 시·군·구에 194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총 1,025건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계)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자체적인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지역특구 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지역특구 지정 이후 자치단체장 교체 등으로 운영이 유명무실하거나 성과가 극히 부진한 특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자체 운영구조 상 자발적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봉착한 지역특구를 지역특화 연고 산업의 성장거점으로 새롭게 활용하고자 지난 4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함. 지역특구가 지역연고산업, 기업의 창업 및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특구제도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사업(Post-RIS)을 적극 발굴토록 하고, 중기부 등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지속 확대, 별도 재정지원 프로그램 마련, 원활한 퇴출·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음. *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산업연구원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 제공

- 산발적인 집단감염 등이 반복되며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방역활동을 모범적으로 이행하는 경제주체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 등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여 장기간 방역활동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이 먼저 선도하여 실행해 나가야 하므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련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가 확진자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글로벌 종식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의 방역활동을 장기간 지속해야 한다는 전체 하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바로가기](#)

■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 (연구 배경 및 목적)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중국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 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됨.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대외 및 국내 정책 수립을 위해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조사 및 분석결과)
 - ①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심화된 국내 산업 및 직종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과 베트남으로의 수출기회가 확대된 산업 및 직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수입경쟁으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보임.
 - ② 대중국·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재편은 제조업 종사자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의 크기는 근로자의 직종과 학력,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정책 제언)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함.

[바로가기](#)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5. 뉴스브리핑

출처

■ 지역균형발전 강화, 분석의 정확성 제고 등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대폭 개선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5.28.(금)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하였다고 밝힘.
-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더불어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의 반영이나, 예타 사업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 산정을 위한 것임.
- 10개 표준지침 중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5개 지침에 대하여 우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지침별 리뷰팀(50명)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개정 방향, 개정 필요항목 등을 논의함.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지역균형발전 평가 ② 사회적 할인율 ③ 비용·편익 산정기준 ④ 추후 검토사항 등이며, 이번 개정된 표준지침은 '21년 제1차 예타 대상선정('21.4.30) 사업의 예타 조사 단계부터 적용됨.

[바로가기](#)

■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5.14.(금) 정부가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2021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공표했다고 밝힘.
- 정부배당금은 총 1조4,396억원으로 전년대비 356억원 증가,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전년대비 4.34%p 상승함.
- 이번 배당은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배당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고려하여 기관 및 소관부처와 협의 후 확정함.
- 배당 결정된 한전 등 20개 기관은 총 1조 4,356억원의 배당금을 국고에 기 수납하였으며, KBS(33억원), EBS(8억원)는 방송법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수납할 예정임.

[바로가기](#)

■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1.(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힘.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함.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임.

[바로가기](#)

5. 뉴스브리핑

출처

■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사회 한 목소리

환경부

- 환경부는 5.31(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순환경제 기본세션'을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순환경제 기본세션은 '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NGO), 전문가 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해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준비했음.
- 행사는 한정에 환경부 장관의 '탄소중립과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개회 연설을 시작으로, 레아 베르멜린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 롤프 파엣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짐.
- 이어진 참가자 토론에서는 제임스 후퍼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 주체별 역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아울러, 피포지(P4G) 사무국에서 주도한 후속 세션에서는 케빈 모스 세계자원연구소 국장이 좌장을 맡아 방글라데시, 케냐,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함.

[바로가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5.18.(화)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힘.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②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③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바로가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2020년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2년 일자리사업 운영방향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함.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671만명, 22.6만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음. ('20년 11월 기준, 3·4차 추경사업 제외)
- '22년 일자리사업은 그간의 방역 성과 및 백신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직접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할 계획임.

[바로가기](#)